

발포 명령자·헬기 사격·암매장...진실규명 계속된다

5·18민주화운동 미완의 과제들

사망자 집계·행불자도 41년 미국 광주학살 책임자 통한 확인 불가능
5·18조사위 '엄정한 조사 지속'

전두환(90)씨가 23일 사망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미완의 과제들이 역사 속에 묻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지 확인 등은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과제임에도 신군부의 총 책임자였던 전씨의 입을 통해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최고위 대령은 실권이 없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세였다'는 점이 미국 정부의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전씨는 5·18의 미완의 과제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마스터 키였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부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엄군내에서 시민들을 향한 사격을 명령한 이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광주 상공에서 시민들을 향해 쏘던 헬기사격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씨가 사망한 것이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5시에 광주교 부근에서 11공수 63대대 장교가 쏜 최초 발포, 20일 광주역 집단 발포,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의 명령권자와 지휘체계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

과 함께 5·18 당시 핵심인물들의 행적 및 발포명령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신군부 핵심인물들의 명단과 그들의 행적을 추적해야 하지만 전 씨 본인을 통한 확인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인 1980년 5월 18일~27일 까지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집계도 여전히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남겨져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는 최근 계엄군 총·갑에 숨진 민간인을 167명으로 잠정 집계했지만,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아니다.

또 당시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5·18 핵심 의혹은 바로 '행방불명과 암매장' 문제다. 암매장을 비롯한 사체의 유기 여부를 규명하고, 그에 따라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이다.

5·18진상조사위는 지난 9월 전씨와 노태우씨 등 당시 신군부 주요인물 등 5명(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총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에게 5·18 진상 규명을 위해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는 공지를 보냈다. 이들에게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이른바 '내용증명' 형태의 서한문을 보냈지만, 전씨는 지병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5·18진상조사위는 이날 '조사대상자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신군부 핵심인물들은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할 것"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네번째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으나 호소 관련 등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죽음이 면죄부 안돼...역사의 책임 물어야"

호남 국회의원·시장·지사 입장문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전두환의 죽음과 관련 "진실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죽음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애도조차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날 광주·전남·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살인마 전두환이 사망했다.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법원이 이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성주, 김수홍, 김승남, 김원이, 김윤덕, 김희재, 민형배,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항자, 윤영택, 윤재갑, 윤준병, 이계호, 이병훈, 이상직, 이윤민, 이원택, 이형석,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국회의원(7나다순)이 참여했다.

이들은 "1980년 5월, 헬기사격의 진실을 밝힐 기회도 소멸했다. 그러나 역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법원에서는 '공소 기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진실 찾기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역사의 죄인 전두환에게는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반성과 사과 없는 죽음에 광주시민은 울분과 분노가 앞선다"며 "(그의) 죽음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국가 지도자들의 역사적 책임은 생사를 초월하여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살아있는 5·18 책임자들은 그의 죽음을 교훈으로 받아들여 이제라도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입장문을 내고 "전두환은 5·18 유혈 진압의 주범으로서 발포 명령권자 등 진실 규명에 대한 절절한 외침을 끝내 외면했다"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또한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두환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5·18의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해온 그에게 어떤 애도도 적절치 않다"며 "전두환은 갔어도 5·18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있다. 이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이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싸늘한 정치권...여야 지도부·대선후보 4인 조문 않기로

민주·정의 '전두환 씨' 호칭

국힘, 조문 여부·메시지 고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23일 정치권은 싸늘한 분위기였다. 여야 대선주자와 지도부 대부분은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때 고인의 역사적 과오 평가에는 온도차를 보이면서도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빈소를 찾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여권은 생전 과오에 대해 사과와 참회가 없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조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인에 대해 '전두환 씨'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불기"라고 밝히면서, 당 차원에서 조화나 조문 등 애도의 뜻을

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당의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에 올린 메시지도 처음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는 문장을 포함했다가 이를 삭제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 호칭도 이내 '전두환씨'로 수정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군사쿠테타 범죄자 전두환 씨가 역사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망했다"며 "전두환 씨의 죽음은 죽음조차 유죄"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오전에 조문 여부부터 메시지 수위까지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국민의힘은 오후에야야 당 차원에서 조화는 보내고 당내 구성원들의 조문은 자유롭게 결정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저는 전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며 "당내 구성원들은 고인과의 인연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조문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된다"고 밝혔다. 국민

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전 전 대통령이 5·18 무력 진압 등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점을 일제히 비판했다. 여야 정당의 대선 후보 4명 모두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중대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은 점을 참모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확산 사건의 주범이다.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여의도에서 경선 주자들과 조찬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이시니가 조문을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2시간 30분 뒤 수석 대변인을 통해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며 입장을 번복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조화·조문·장례 지원 계획 없다"

청와대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전 전 대통령은)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

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또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경우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실무진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때에는 청와대는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조문한 바 있다. 청와대의 입장문도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추모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등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전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점 등 과거 행적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